

특별기고

강수훈

광주시의원



2026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과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채 플라스틱 바구니와 종이상자, 쇼핑백 등을 통해 전달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특히 채용 및 친인척 채용 의혹, 반복적으로 제기된 조직 운영 문제,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인력 관리 부실 등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선관위 무능의 끝판왕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투표용지 몇 장이 부족했다는 데 있지 않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투표용지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적인 수단이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다. 국민의 참정권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분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벌어졌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을 바라보며 느끼는 '참담함'이다.

최근 잠실 일대에서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시민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다.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냐다.

선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특정 후보나 진영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뢰 없는 민주주의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투표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국민이 절차 전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민이 "내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면, 그때 무너지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다.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결과를 만들기 위해 투·개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부정선거'와 관리 부실이나 행정적 오류로 인해 선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실선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선거 결과의 조작 여부가 아니다.

선거관리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국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도 하나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변명이나 내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과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 해체 또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관리 기능 자체를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선거관리 기능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신뢰를 잃은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자는 의미다. 신뢰를 잃은 기관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혁신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 역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역사에서 광주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특정 정권도, 특정 정치세력도 아니었다. 민주주의 그 자체였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광주는 기꺼이 희생했고 행동했다.

광주가 선관위 대개조를 힘껏 외쳐야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특정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칙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기고

고사 위기 임업인의 눈물을 닦아줘야

박철형

임업인



우리 국토의 허파이자 민생의 근간인 산을 지키는 이들의 목소리가 절절히 소외돼 있다. 바로 전국 2위의 임업 규모를 자랑하는 전남의 임업인들이다.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농업이나 어업 등 타 1차 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제도적 지원과 그로 인한 소득 불안정이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오랜 기간 소외된 임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상상감과 박탈감뿐이다. 농업 직불제에 비해 경영체 등록 기준 시점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묶여 있어, 수많은 영세 임가들이 시작부터 배제당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비록 최근 들어 농업 소농직불금과의 선택적 규제 완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임업인이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산림이 제공하는 탄소 흡수, 산소 배출, 토사 유실 방지 등 친환경적인 공익적 가치에 비해 임업 직불금 예산 규모와 지급 단가는 농업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분을 회수하기까지 최소 30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임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소득 공백을 메워줄 실효성 있는 소득 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상가상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임업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전남은 매년 반복되는 기상적인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로 인해 황칠나무, 버섯, 산나물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의 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임업인들을 고사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 당국이 제시하는 화학 약제 방제를 수용하면, 임업인들이 피담 흘려 획득한 '친환경 임산물 인증'이 화학 성분 검출 우려로 취소되는 황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방제를 하면 인공이 날아가고, 방제를 거부하면 평생 일군 산림이 죽어 나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임업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

노동 환경의 낙후성과 인력난 역시 한계점에 다다랐다. 경사가 가파르고 험난한 전남의 산지 특성상 대형 농기계의 진입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작업이 인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역 소멸과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 농촌에서 산노동을 감당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경영비 부담은 임업인의 목을 죄어오고, 험한 지형 탓에 미끄러짐이나 추락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은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보호라는 명목 하에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규제망은 내 산에 진입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게 가로막아 임업인들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다.

결국 임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임업직불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체 등록 시점 제한 등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철폐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해 직불금 지급 단가를 농업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 소외된 임업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산림 보존의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재선충병 방제와 친환경 인증 제도의 유연한 연계가 시급하다. 국가적 재난인 재선충 방제에 의해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재해 보험의 보상 범위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임업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산림 작업의 첨단 기계화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경사지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소형 임업 기계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시스템 확충은 고령화된 임업 현장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유일한 열쇠다.

산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산을 지키는 임업인이 행복해야 우리의 미래 환경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라도 임업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방적인 규제 대신 상생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작이다. 당선인들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청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며 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았다. 이는 기존 시장 운영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신임은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행정 통합의 시너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도 당선인들의 몫이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약속의 실천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성과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이번 선거의 의미도 완성된다.

사설

고흥·무안·여수 갯벌도 세계유산 등재유력

갯벌은 사전적 의미로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 때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말한다. 점적토·점토·바다 생물의 분해물이 쌓여 형성된 노출된 진흙층이다. 주로 크고 작은 만, 석호, 갯이처럼 조류의 흐름이 무딘 곳에서 형성되며, 물살이 약한 섬 뒤쪽 같은 환경에서도 잘 만들어진다고 한다.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 보전 서식지로 해안 침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 철새 등 생물 2000여종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라는 장점이 있다.

이런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됐다. 신안과 보성·순천, 전북 고창, 그리고 충남 서천 등 4개 갯벌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여수·무안·고흥 갯벌과 충남 서산 갯벌 등 2곳의 추가 등재가 유력시된다고 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최근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확대 등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IUCN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에 중요한 자연서식지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분류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각국이 후보유산을 신청하면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IUCN이 자료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등재 가능성을 평가한다.

최종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자문기구가 등재를 권고한 경우 대체로 최종 등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등재가 확정될 경우 세계유산이 된 '한국의 갯벌'은 총 6곳이 된다.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 등은 이들 갯벌들이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바란다.

지역 PC방 경영난에 '줄폐업' 잇따르는데...

엔비디아(NVIDIA)는 가상 컴퓨팅을 개척해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에서 대규모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 AI 학습·추론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설계·공급하는 기업으로 관련 인프라 수요가 커지며, AI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로 평가받고 있다.

젠스 황 대표는 1990년대 말 한국시장을 자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며 개척했는데 당시 PC방 문화는 엔비디아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런 역할을 했던 PC방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국제통계개발원(TASIS)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PC방 수는 242곳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63곳보다 21곳 감소한 수치다. 전남 역시 지난해 4월 276곳에서 올해 4월 247곳으로 29곳 줄었다. 불과 1년 만에 지역에서 50개의 PC방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과거 학생과 청년층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이곳이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시장 확대, 온라인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 등으로 이용 수요가 크게 준 것이다. 집에서 고성능 PC를 갖추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늘면서 PC방만의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또 비용 부담도 커졌다. 주로 야간이나 24시간 운영하는 PC방 특성상 아르바이트생 의존도가 상당한데 이들의 인건비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도 고민거리다. 이곳이 수십 대에서 많게는 100대가 넘는 컴퓨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데다 냉난방 시설과 환기장치까지 상시 가동해야 해 전기 사용량이 일반 자영업보다 훨씬 많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달부터 시행될 경우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최근 들어 대세가 되고 있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CPU 등 고사양 게임 환경에 맞춘 시설 투자도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경기침체 등까지 겹치면서 최근의 감소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소 규모 PC방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 PC방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취재수첩

선택은 끝났다... 이제는 증명할 시간

송대영

사회부 차장대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남 광주특별시장과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지역사회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4년이다.

선거 기간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 발전 전략부터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수많은 약속이 쏟아졌다. 당선

인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약속을 정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첫 선거였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통해 새로운 통합시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 결국 지방정치의 출발점은 주민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교통과 교육, 복지와 경제, 청년과 노인 정책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지방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시민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3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간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